

檢 “돈봉투” 증거인멸” 이번엔 인정될까

증거인멸 정황과 혐의 보강해 재청구 송영길 전직 보좌관 등도 피의자 조사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 전 감사는 지역상황 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주고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도 있다.

또 현역의원 10~20명에게 지급할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감사는 또 지난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계약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사건 관계인들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면서 먹사연 내부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포맷 또는 교체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 다음날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러한 점도 증거인멸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말뭉치기뿐 아니라 자료 폐기나 은닉 등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확인됐다”며 “다수 관련자가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은 PC 포맷이나



휴대전화 초기화 정황 등에 대해 일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전 감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같은 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성경찰, 축제기간 정책홍보 부스 운영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보성차문화공원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과 안심귀가 팔찌배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학교폭력·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치안정책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성=김태순 기자



무안소방,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 청춘 노인단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무안군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마을주민(55세~65세)으로 구성된 청춘 노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소방,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자 간담회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지난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해경, 어린이날 연휴 집중호우 대비 위험요인 점검 나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계수)는 “남해서부 전 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연안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 치안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완도해경, 연휴 기간 기상악화 해상안전 수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연휴 기간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화재 전복 표류선박 등에 따른 현장대응과 응급환자 2명 이송에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지방방위청, 직원 대상 챗GPT 교육 실시

광주-전남지방방위청(청장 김용우)은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자살률·양육비·저출산 1위...그럼에도 행복하다는 ‘대한민국’

韓, 2003년부터 자살률 1~2위...OECD 평균 2배 자녀 양육비 3억6500만원...2위 中과 7배 격차 그럼에도 ‘행복한’ 韓...행복지수 59위 2계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4.1명(통계청 집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육비 부담 역시 압도적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 한 명당 3억6500만원의 양육비가 들어 2위 중국 9300만원의 7배에 달했다. 양육비 1위의 영향일까?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1.0명 이하 국가이다.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죽음만이 가득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 세계행복지수 순위는 2년 연속 상승세다.

◆ 자살률 1위 대한민국...10-20대 자살률 큰 폭 증가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을 비교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

장 높았다. 2003년 이후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2016~2017년(리투아니아) 2개 연도 뿐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1.1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10~20대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지만 한국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전년대비 9.4%, 12.8% 대폭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안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고생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해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자살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사회적 고립도’ 역시 34.1%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끊어진 상태일 때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만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최대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양육비 압도적 1위...출산율 0.78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중국의 인구·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위외인구연구소가 2010~2021년 14개 주요 국가에서 발표한 양육비 관련 수치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한국 1인당 GDP(약 4700만원)로 추정해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약 3억65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중국 연구진이 자국 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크다. 중국은 지난해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고 출산율은 7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연구진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면서 “비싼 양육비는 자녀 출산의 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출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3명 감소한 0.78명이다. 통계청이 1970년 통계 작성한 이래 최저

치다.

◆ 그럼에도 행복하다는 대한민국

자살률 1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 양육비 1위, 출산율 최하위.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른들의 비명소리에 묻혀가는 한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서히 행복해지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NSD)가 공개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5.95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서 전년 대비(59위) 두 계단 상승한 57위를 기록했다. 제작년과 비교하면 다섯 계단 넘게 올랐다. 물론 주요 선진국 그룹인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행복지수는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평균 행복지수 5.6점, 전 세계 평균 행복도 5.5점을 근소하게 상회했다. 특히 전 세계 행복지수는 전년 대비 0.1점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주변국 중 일본은 6.12점을 받아 우리보다 10계단 앞섰지만 중국은 5.81점으로 우리보다 7계단 뒤처졌다. 미국은 6.89점으로 15위에 올랐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37개년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매긴다. 여기에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도 함께 측정된다. 김재환 기자

대학 안갈거야·오전 6시 등교...광주 학생들 인권침해 진정 제기

교육단체 “인문계 고교 0교시 등교·야간보충수업 추진”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일선 고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0교시·야간보충수업’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학생살리기교육연대는 “지역의 대부분 인문계 고교의 학생들이 강제 조기등교·방과후 야간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

고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점선 교육감 부임 이후 인문계 고교 10개 중 6개교가 폐지했던 ‘0교시 등교와 야간보충수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학교는 ‘자율’로 주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대학 안갈거야’ ‘방과후 국·영·수과목만 보충 수업’ ‘오전 6시 일어나 등교’ ‘학원 시간 강

제 조정’ ‘보충수업 빠지면 교사의 질타’ 등이 이어져 빠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도 조기등교·늦은 귀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고교의 강제학습 부활은 시교육청이 조기등교·야간 보충수업 금지 조항이 담긴 ‘정규의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폐지했기 때문이며 성적만 강요했던 1980~1990년대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부활에 대해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